

4년새 국내 양파 자급률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양파 저율관세 확대가 초래
이원택 의원 “국내산 중심 가격 탄력 대응체계 시급”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TRQ) 양파 수입 확대가 국내 양파 자급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양파 자급률이 2021년 99.7%에서 2024년 89.2%로 1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양파의 저율관세(TRQ) 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TRQ 물량이 전무했으나, 2022년 6.8만 톤(관세 10%·50%)이 수입된 데 이어 2023년에는 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135%의 고율관세가 적용됐음에도 8.1만 톤이 수입돼, 국내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거래 동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다.

2020년 전체 양파 거래량 중 중국산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나, 2025년 현재 전체 거래량 13만 톤 중 2만 톤

(16%)을 차지하며 12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중국산 양파의 경매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확대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9개월 중 16개월 동안 중국산 양파 경매가격이 국내산을 웃돌았는데, 이는 고율관세 물량만 시장에 잡히고 저율관세 물량은 별도 경로로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실제 중국산 양파의 국내 유통량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 반발로 이어졌다.

지난 8월 11일, 전국양파유통인연합회는 서울 가락시장 내 4대 도매시장 법인을 상대로 외국산 양파 경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내산 출하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 양파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자급률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품종개량, 비축물량 확충을 통해 국내산 중심의 가격 탄력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논문위조와 관련해”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집값 오름세 억제 수단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회 국토위 국감서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3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더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장대 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 이번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 강화 △전세대출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4억원 추가 제한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금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 대책이 보류세 인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 6월 초 집값을 잡는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로서는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도을 국민의힘 의원은 “귀를 의심하게 되는 풍문을 들었다”며 “김 장관이 취임한 후 관가에는 내가 아는 게 뭐 있느냐.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떠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그런 근거없는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받은 건보료 급증

단 1년 만에 54.5% 증가… 혜택 못받은 저소득층 비율도 10%p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이 소멸시효 경과로 사라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율이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줄어드는 등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지나 환급을 받지 못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원)에서 2021년 2만13,733건(150억3,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

득층(8~10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이는 제도 인식 부족과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고액 장기채납자의 환급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2020년 240명(1억 9,468만원)에서 2024년 395명(4억5,580만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 현행 제도상 채납금액을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채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계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제도 전체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연간 환급액은 2020년 2조2,471억원에서 지난해 2조7,920억원으로 24.2% 증가했으며, 환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66만여 명에서 213만5,776명으로 28.0% 늘었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이 10만9,215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해 제도가 노년층 의료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잠정 중단 요인은 예산 고갈”

민주 신영대 의원 “전세 사기 후폭풍 관리 못한尹정부 실책, 국민혈세 투입 초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중단의 원인은 예산 고갈로 드러났다.

LH는 9월 22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의 잠정 중단했다. 국고보조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493억원을 긴급지원 받은 후 10월 13일 수시모집 청약접수를 재개했다.

당초 LH는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며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의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개수수료, 도매·장관비, 보증보험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그런데, 전세 사기 급증으로 인해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

가했다. 더욱이 LH는 동일 물건에 대해 보통 4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기에 체감 상승 폭이 높았다.

실제로 2021년 LH가 SG서울보증에 지급한 보험료는 292억원인 반면, 2025년에 지급한 보험료는 745억원으로 453억원이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보증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을 예상하고 올해(2025년) 국고보조금을 전년대비 644억원 증액했

으나(24년 1,115억원 → 2025년 1,806억원), 예상보다 더 폭증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경상보조비가 바

다한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긴급 협의 끝에 국고보조금 493억원을 추가 수혈받은 뒤 10월 13일 청약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다.

신영대 의원은 “급작스러운 수시모집 중단으로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았다”며, “결국 전세 사기 후폭풍을 관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윤준병 의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 공식 선임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공식 선임됐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5년의 농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농해수위 간사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제 추진과 농어업 민생정책 실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